

[간담회 자료집]

2011년 농업전망과 정부·국회·농민단체
역할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일 시 : 2011년 1월 26일 (수)
장 소 :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

주최 : 국 회 의 원 김 춘 진
주관 :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간담회 자료집]

2011년 농업전망과 정부·국회·농민단체
역할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일 시 : 2011년 1월 26일 (수)
장 소 :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

주최 : 국 회 의 원 김 춘 진
주관 : 한국농업경영인증양연합회

대 회 사

국회의원 김 춘 진
민주당, 고창·부안



안녕하십니까? 김춘진 의원입니다.

2011년 새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개최되는 “2011년 농업전망과 국회, 정부, 농민단체의 역할”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이자 식량안보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이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인해 농작물 생산이 급감하였고,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 비료값이 또다시 들쭉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쌀 가격 등 농작물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농촌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일부 작물들 또한 농민들이 판매하는 산지가격은 체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만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있어 유통과정에 대한 개혁이 절실합니다.

이뿐입니까?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50여일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살처분된 가축이 2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백신투여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제역 확산 기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업은 구제역이 아니더라도 한-미FTA와 한-EU FTA등으로 인하여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이어서 더욱 안타까움이 큼니다. 그동안 축산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왔던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분간 생계를 이어갈 수단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농축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산업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야기할 만큼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간담회는 여러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금년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 전망해 보고, 국회와 정부, 농민단체가 각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때로는 의기투합해야 하는지 논의해 보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생산적 논의를 통해 작년보다 우리 농민들이 좀 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2011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책임과 소명의식으로 심도 깊은 토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중앙회장 김준봉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11년 농업전망과 정부·국회·농민단체 역할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귀한 의견을 내 주시고자 함께 하고 계신 내빈 여러분과 주제발표자, 지정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있지만, 350만 농업인들의 가슴은 무겁기만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전국을 휩쓸고 있는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는 물론, 이상 한파로 인한 농업재해와 난방비 등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식 같은 소와 돼지를 살처분해 땅에 파묻고, 갑작스런 폭설과 냉해로 애써 키운 하우스농사를 망쳐버린 농심은 시커멓게 타들어만 갑니다. 어디 기댈 곳도, 목 놓아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설 대목도 지역 축제도 사라진 농촌은 유명 마을처럼 변해가고, 넉넉하고 포근했던 인심도 메말라가고만 있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 농업인의 최대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라의 껍에 빠져 용왕에게 붙잡혀 온 토끼가 “나의 간은 육지 깊숙한 곳에 놓고 왔다”며 기지를 발휘해 바닷속 용궁을 탈출하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1년 신묘년을 맞아, 총체적인 농업, 농촌의 위기를 옛 이야기 속 토끼와 같이 슬기롭게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350만 농업인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 곳 국회에서 농업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개최하는 “2011년 농업전망과 정부·국회·농민단체 역할 관련 전문가 간담회”는 많은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제역 및 AI 사태를 통해 농업·농촌·농업인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각 농정 주체가 당장의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따지고 미루기보다는, 열린 마음과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반성하여, 우리 모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상생 협력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국회·농민단체가 책임져야 할 짐이 너무나도 막중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보다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논의와 농정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오늘 간담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전북 고창·부안 지역구의 민주당 김춘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

차

간담회 개요	1p
발제문 1 : 2011년도 농업 전망 (김병률 미래농업정책연구실장)	2p
발제문 2 :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계획 (김덕호 농업정책과장)	19p
발제문 3 : 2011년도 한농연 농정 기조 및 대응방향 (박상희 정책실장)	33p
발제문 4 : 2011년도 법안 및 예산 관련 국회 역할 (윤태진 수석전문위원)	48p
메 모 장	62p

- 간담회 개요 -

1.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1년 농업전망과 정부·국회·농민단체의 역할 관련 전문가 간담회
- 일시 : 2011년 1월 26일 (수) 14:30 ~
- 장소 :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
- 주최 : 국회의원 김춘진
- 주관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 행사 식순

시 간	행 사	내 용
~ 14:30	토론자 접수	등록접수(~14:30)
14:30 ~ 15:00	1부 : 식전 행사 (14:30~15:00)	국민의례, 인사, 참석자 소개(14:30~15:00)
15:00 ~ 16:00	2부 : 발제 (15:00~16:00)	발제1 : 김병률 KREI 미래정책연구실장 - '11년도 농업 전망 발제2 : 김덕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 - '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계획 발제3 : 박상희 한농연 정책실장 - '11년도 한농연 농정 기조 및 대응방향 발제4 : 윤태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 '11년도 법안 및 예산 관련 국회 역할
16:00 ~ 17:00	3부 : 지정토론 (16:00~17:00)	토론자 패널 토론 (16:00~17:00) - 좌장 : 김 호 단국대학교 교수 전찬익 농협경제연구소 실장 김창수 농협중앙회 부장 오세복 도매시장법인협회 국장 유정규 지역재단 이사 홍치선 농어민신문사 편집국장

**2011년 농업전망과 정부·국회·농민단체
역할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발 제 문 1

2011년도 농업 전망

- 2011 농업전망 및 쟁점과 농정과제 -

김병률 미래정책연구실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 2010년 농정 외고

□ 쌀 과잉 지속과 조기관세화 논쟁 및 생산 감소

- 2009년 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이 2010년으로 넘어와 과잉문제해결과 가격하락 방지에 농정의 절반 할애
- 쌀 소비감소 추세에 따른 과잉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배 재배면적 감축과 타작물재배를 권장하는 생산조정 추진과 조기관세화 논쟁
- 이상기후 영향으로 추곡 생산량이 전년대비 12.6% 감소하여 쌀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함으로써 쌀 과잉문제를 다소 완화하였으나, 이월재고와 수입쌀 재고 등으로 과잉문제 지속

□ 이상기후에 의한 원예작물 생산 감소

- 상반기 저온과 일조 부족, 냉해, 그리고 하반기 잦은 강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배추값 폭등 파동, 대부분의 채소, 과일값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여 긴급히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개선대책 수립

□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연말 구제역파동

- 소 300만두, 돼지 1,000만두 등 사육두수가 늘어남에도 고공행진을 보였던 소, 돼지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나, 연말 구제역 확산으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

□ FTA 협상 진전

- 역사적인 G20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세계화와 국격 제고를 지향하면서 탄력을 받게 된 자유무역협정은 10월 한-EU FTA 체결로 하나의 결실을 맺었으며, 한-중 FTA 논의도 2004년 시작되어 2007년부터 4년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되고 정부간 사전협의를 시작되면서 본격화
- 정부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한-미 FTA는 2010년 들어 추가협상, 재협상 등 난항을 겪었으나 자동차부문의 조정으로 추가협상 마무리
- 그 밖에도 호주, 페루, 콜롬비아, 뉴질랜드, 터키와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FTA를 통한 세계화 가속

□ 농협개혁 논의 이월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신경분리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안이 농식품부와 농협, 학계 논의로 만들어져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연말 여야간 예산갈등으로 이월

□ 농정추진 성과와 반성

- 2월 농어업의 체질개선과 신성장동력 창출, 식품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농어업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농식품부에서 「농정 비전 2020」을 수립, 발표하면서 농정 영역을 기존의 농업생산과 유통 등에서 생명산업, 전후방 관련산업, 식품산업을 포괄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농업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촌활력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져 시행
- 3년전부터 농정대상에 식품산업이 포함되어 금년에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대책을 추진하였지만 아직은 농업인과 농업관련기관, 학자들 모두의 마인드가 농업생산과 유통이라는 관념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
- 그럼에도 막걸리를 비롯해 쌀 가공식품산업이 크게 확장되었으며 한식세계화 사업들이 많은 결실을 맺었으며,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실시 확대에 의해 우리 농산물 소비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 농식품 수출은 이번 정부 들어 특별히 강조하여 추진함으로써 농식품수출액이 22.3% 증가한 58.8억달러 달성으로 2012년 100억불 목표 달성에 상당한 접근
- 종자·생명산업 육성, 민간자본의 농업투자 유도, 녹색성장산업 추진, 농업과학기술 육성 계획 수립 등 농어업 체질개선과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으로 향후 적극적인 추진 필요
- 미래는 종자전쟁시대가 예견되고 있으나 과거 대부분 종묘회사를 초국적 종자 메이저들에게 넘겨 종자주권이 심각히 위협받는 현실을 반전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며, 생명공학(BT)과 융복합에 가장 적합한 농업분야의 생명산업 육성은 미래농업을 최고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야이기 에 농업과학기술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시발점을 만든 정책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의 충분한 유인을 위해서는 모태펀드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민간자본의 유인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농식품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시범 조성, 녹색성장대전 등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여전히 초기 정책개발 단계로서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많은 정책들 개발 여지
- 농어업경영 혁신과 비용절감을 위해 3월에 「비용절감 운동본부」를 설립하여 6월에는 향후 5년간 쌀 비용절감 10%, 노지채소와 과수 20%, 시설채소와 축산 30% 등 품목별 비용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용절감 교육, 회계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용절감은 농가 차원에서 실천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는 속성상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지속적 추진 필요
- 배추과동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급안정과 유통개선대책은 오래된 역사를 갖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온 중장기적 추진과제로서 정부는 사이버거래소 운영 활성화, 직거래 자금 지원, 산지유통 운영자금 지원체계 통합, RPC 경쟁체제 도입,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11월 들어 수급안정과 연계한 유통개선대책을 수립
- 정부는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특히 제2차 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10~14년)의 일환으로 연말에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에 걸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세부운영방안을 확정. 지역개발사업이 기존의 개별사업에서 포괄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시군별로 중장기 포괄보조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컨설팅, 사후평가 등 사업의 편성과 집행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도우미 지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복지 지원을 강화. 또한 농촌형 뉴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쟁점은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임.

Ⅱ. 2011년 농업 전망

□ FTA 체결 확대로 농식품 교역자유화 확대

- 국회 비준이 통과될 경우 한·미 FTA, 한·EU FTA협정이 발효되어 미국, EU와 교역자유화 본격 추진 예상
- 한·중 FTA 협상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국들과도 FTA 협상이 추진될 예정

□ DDA협상 체결로 2012 DDA체제 출범 준비

-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담 결과 2011년말까지 DDA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년말 DDA협상 타결 예상
- 이에 따라 향후 농정도 DDA협상 타결에 대응한 준비가 진행될 것이며, 일부 농민들의 반대 및 대응책 요구 가능

□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 등 빈발 예상

- 2010년과 같이 2011년에도 이상고온, 잦은 강우, 태풍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2010년말부터 발생한 한파 영향으로 배추, 무, 시설작물 공급 차질 및 가격불안 지속
-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폭설, 한파, 홍수 등 이상기후는 강력한 '라니냐'의 영향 때문으로 올 여름까지 북반구에 영향을 미쳐 농작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NASA 등 전문가들 전망

□ 구제역, AI 등 축산질병과동에 따른 축산업정책 대전환 예상

- 전대미문의 전국적 구제역 발생과 AI 발생에 따른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의 대량 살처분 매몰과 가축 사육두수 급감 등이 진행되어 축산업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논의 예상
 - 축산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 가축사육환경, 친환경축산 등 새로운 그랜드 플랜 수립 예상

□ 국제 원자재값 동반 급등으로 국내외 농식품 물가 불안 가중

- 기상이변 빈발에 따른 공급 축소, 세계 경기회복 흐름에 따른 수요 증가, 달러 유동성 증가에 따른 투기성 자금의 유입 등에 의해 원유, 철강, 곡물, 원당, 면화 등 국제 원자재값의 동반 상승
- 국제 원유가 배럴당 100달러시대 돌입: OPEC의 여유 생산능력 소진, 유럽 등 한파로 수요 급증 등으로 지난 4개월만에 유가 25% 급등
- 곡물, 원당, 면화가격 급등: 설탕가격 30년만에 최고, 옥수수, 밀, 콩 가격 최근 2년간 최고가격 기록, 중국·파키스탄 등 주요 생산국 흉수피해로 면화가격 100년여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
-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국내 수입물품 가격 상승, 국내 물가 불안 증폭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수요 급증 예상

□ 세계적인 이상기후 등으로 국제곡물 생산 불안정이 지속되는 반면, 바이오연료용 수요,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수요 증가로 국제곡물가격 고공행진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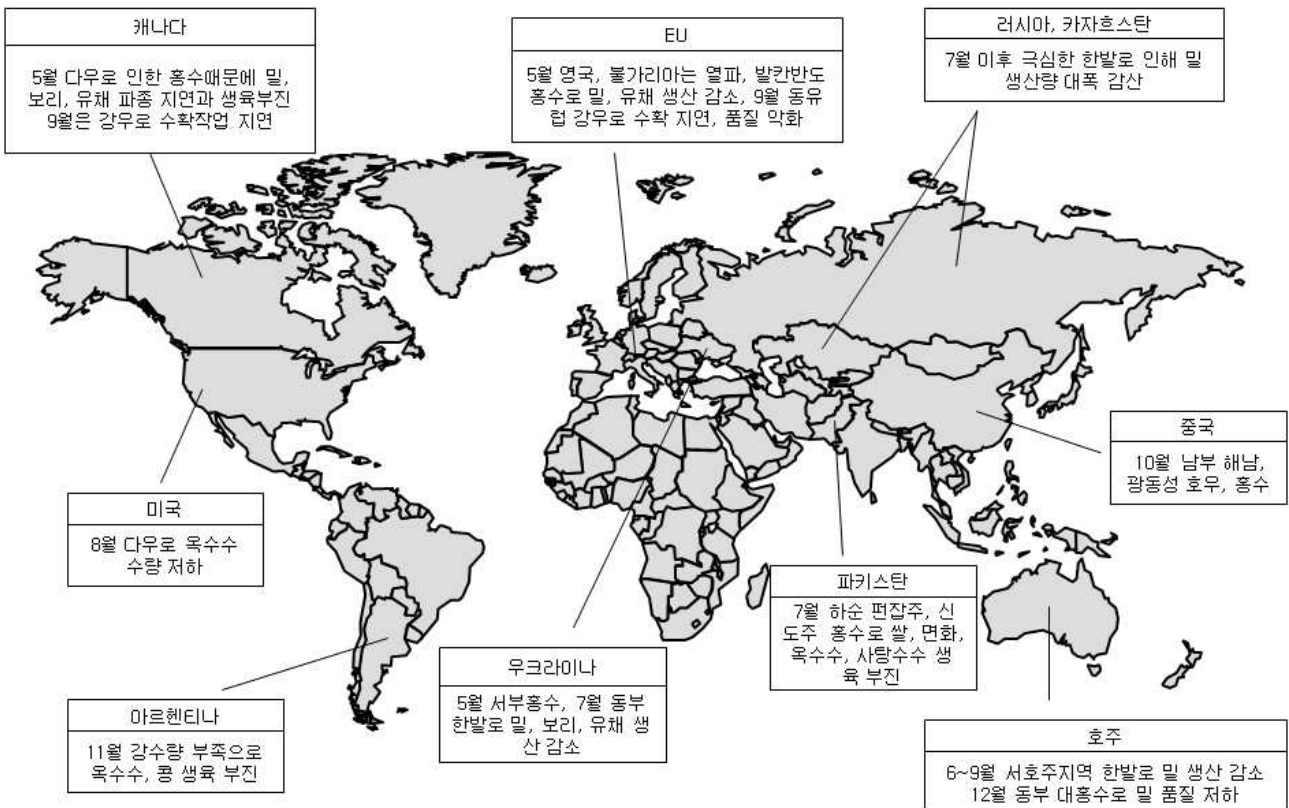
-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의한 곡물 공급 차질과 수요 증가에 따른 기말재고율 감소 전망: 옥수수(15.5%, 2.6%p↓), 밀(26.5%, 3.7%p↓), 대두(23.5%, 1.8%p↓), 곡물 전체(19.3%, 3.1%p↓)
- 국제유가 상승은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가를 초래하여 곡물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저금리정책, 달러화 약세로 2010.7월 이후 투기자금이 곡물 선물 시장에 유입되어 국제곡물가격 상승
- 중국, 인도 등 거대인구 신흥국들의 육류소비 증가에 따라 사료용 곡물 소비와 수입 증가로 국제가격 상승: 2010/11년 기준 세계 밀, 옥수수, 대두 소비량 가운데 중국과 인도 비중이 각각 28.8%, 21.6%, 30.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국제곡물 및 설탕 가격 상승>

	'08년 평균	'10.6월(A)	'10.12월(B)	B/A (%)
밀	294	165	278	168.4
옥수수	208	136	231	169.2
콩	453	348	484	138.9
설탕	267	348	685	196.7

<곡물수급에 영향을 미친 2010년 전세계 이상기후>



□ 복지논쟁과 농촌 영세고령농 관심 증대

- 정치권의 복지논쟁(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맞춤형 복지 등)으로 각 부문의 복지문제 부각
- 농촌의 빈곤 고령농 생활상 관심 증대
 -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000만원 미만 고령농가 비율: 77.5%
 - 경상소득 기준 빈곤인구 비율: 대도시 6.6%, 농촌 14.8%(보사연)
 - 빈곤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대도시 93.5%, 농촌 48.6%
 - 농수축산업 종사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 1.0%(행안부)
 -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45.7%가 연금 미 수급자, 연금 수급액도 소액에 불과
(연금 수급액 연 200만원 이하 비율: 72.6%)
 - 국민연금 미 가입률: 농림어가 44.4%, 도시주민 28.5%(통계청)
 - 농지연금의 지역적 격차로 인한 실질 수혜 취약: 2011년부터 시행될 농지연금의 대도시 근교와 산간오지 격차로 중산간 고령농업인 실질 수혜 미약
- ※ 논 1,500평 소유 70세 농업인의 농지연금 수령액 비교: 서울근교 월 76만원 이상, 지리산 산간오지 월 85,500원(평당 공시지가 15,000원 가정)

□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농업 생산, 수확 인력 부족 심화 예상

- 농업 생산 및 수확 인력 부족 심화로 농업생산면적 감소와 인력 부족에 의한 생산 애로 심화 예상
 -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쿼터 배정 및 이용,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력 조달 문제 공론화 예상

□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농협신경분리

- 수년간 끌어왔던 농협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됨으로써 협동조합 내부의 진통이 예상되며 신용, 경제 각 분야의 자립을 위한 노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

Ⅲ. 2011년 주요농정과 쟁점

1. 2011년 농정 쟁점과 과제

□ 농정 화두: 3安(3S)

- 안전(Safety): 가축질병, 친환경, 식품안전
- 안보(Security): 이상기후, 국제곡물 수급불안에 따른 밀, 옥수수, 콩 등 수입곡물의 안정적 조달(식량안보), 식품안보
- 안정(Stabilization): 채소 등 농산물 생산공급 안정, 물가안정을 위한 농 식품 가격안정

□ 농정 쟁점

- 양정: 쌀 조기관세화, 생산조정(타작물재배), 들녘경영체 육성
- 식량안보: 해외농업개발, 국제곡물회사 육성, 대북농업지원
- 축산정책: 가축질병대응, 축산정책방향(동물복지, 친환경)
- 이상기후(지구온난화)와 농정대응: 가격급등락 대책, 계약재배, 재해대책과 재해보험
- 농촌복지: 영세고령농 복지
- 농업인력: 귀농귀촌, 외국인력 고용

2. 2011년 주요 농정과 과제

□ 쌀산업 정책

○ 주요 농림정책(2011년도 농식품부 업무보고)

- 생산감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축소('15년까지 70만ha로 축소)와 타작물재배 유도
- 2012년 조기관세화 추진
- 가공용소비 확대(현 6%에서 '15년 15%), 생산단가 인하를 통한 수출 확대

○ 쟁점 및 과제

- 재고미 처리방식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현재 재고미에 대한 시장격리를 일정기간 시장공급을 유보하고 일부 가공용 소비를 확대한다는 정책이나, 진정한 시장격리는 국내시장에서의 격리(해외 수출, 원조 등) 또는 용도 전환(가공, 사료 등)인 바, 해외 수출, 원조, 사료용, 가공용 처리 등 적극적 방식 추진 필요
- 일본은 이미 재고미의 일정 비율을 사료용으로 용도전환 처리
- 적극적인 수출 추진 위해 조기관세화 필요
- 쌀 시장을 중국 등 해외로 확대하여 고급미(유기농쌀 등) 위주의 쌀 수출 추진

□ 친환경 축산업, 동물복지형 축산업 육성

○ 주요 농림정책(2011년도 농식품부 업무보고)

- 축산업 허가제, 가축사육시설 방역의무화, 가축거래상인 신고제, 축산 관계자 해외여행 관리 및 검역·검사 강화, 종축 분산관리체계 구축

○ 쟁점 및 과제

- 구제역, AI 등 동물질병이 상시화되는 추세에 대응해 유기축산 등 친환경 축산업 확대 및 동물복지형 축산정책 추진 필요
- 친환경 축산, 동물복지형 축산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 공급,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가축질병의 근원적 통제,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수행 기회 보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래 한국 축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 외국에 비해 생산자,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 홍보

- 한국형 농장동물복지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연구 추진
- 예방접종 중심의 외국의 구제역 방역정책 추세에 부응한 축산질병방역 정책 추진
- 구제역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유럽과 북미대륙은 살처분 우선-확산 우려 시 백신접종, 아프리카 국가들은 예방접종과 이동제한, 중국·대만·일본 등 아시아국가들은 이동제한, 살처분, 예방접종 병행 추진

<국가별 구제역 방역 대책 현황>

국가명		타입	방역조치
아시아	중국	A, O	이동제한, 살처분 및 예방접종
	대만	O, SAT2	이동제한, 예방접종 및 감염축, 동거축 살처분
	한국	A, O	이동제한 및 살처분, 백신예방접종
	일본	O	이동제한, 예방접종 및 살처분
	홍콩	O	이동제한 및 치료
	카자흐스탄	O	이동제한, 예방접종 및 살처분
	몽골	O	이동제한 및 예방접종
	베트남	Asia 1	예방접종
	미얀마	A	예방접종 및 치료
	팔레스타인	O	예방접종 및 치료
유럽	러시아	O	예방접종
아프리카	이집트	O, A	이동제한, 예방접종 및 치료
	모잠비크	SAT2	이동제한, 예방접종 및 감염축, 동거축 살처분
	앙골라	SAT2	이동제한 및 예방접종
	보츠와나	SAT2	이동제한 및 예방접종
	나미비아	SAT1	예방접종
	남아프리카공화국	SAT1	예방접종
	잠비아	O	예방접종
	짐바브웨	SAT2	예방접종

자료: OIE 신고 내역 기준

□ 식량안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주요 농림정책(2011년도 농식품부 업무보고)

-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상향조정, 칼로리 베이스)
-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밀, 콩 등 발작물 산업 육성, 조사료재배 확대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곡물유통회사 설립), 상시모니터링
- 해외농림수산자원개발

○ 쟁점 및 과제

- 향후 국제곡물의 중장기적 수급 불안 및 가격 급등(애그플레이션)에 대응한 식량안보 재인식
- 단순한 수입비축, 수입선 확보 등 '소극적 식량안보'보다 해외농업개발과 메이저 육성, 실질적인 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제고 정책 추진, 국내의 동계작물 재배 등 '적극적 식량안보' 필요
- 식량안보보다 더 나아가 식품안보 개념의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필요

<국가식품시스템 구축(안)>

- 전통적인 푸드시스템은 식량안보, 식품안전, 영양 불균형, 자원남용 및 환경악화 등 시장실패 극복 한계 ⇒ 새로운 시스템 필요
- 국가식품시스템은 정부와 식품체인 내 경제주체들이 국가 및 국민 개개인의 후생 극대화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식품시스템



○ 시스템 방안

- 식품문제를 국가의제로 격상시켜 범정부적으로 식품문제 대응하기 위해 '(가

칭)국가식품위원회' 운영(근거법 제정 또는 기본법률 개정)

- 국가식품안보 및 국가식품시스템 백서 발간으로 대국민 정보 제공
- 식품안보지표 및 지수 개발,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 상향 설정, 목표 달성위한 로드맵 작성
- * '09년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식품안보 지표로 6개 카테고리 및 상위지표, 38개 보조지표를 제시하고 계량화하여 평가
- 제도화를 통한 중장기 식량안보체계 및 유사시 식량공급 체계 구축: '조기경보 지수 단계별 식량안보 매뉴얼' 작성 및 제도화

□ 농촌형 복지정책 추진

○ 주요 농림정책(2011년도 농식품부 업무보고)

-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 농지연금제도, 경영이양 고령은퇴농에 대한 소득지원제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요 지원 등

○ 쟁점 및 과제

- 농촌의 고령 독거노인들에 대한 실시간 관찰체계 구축
 - 고령 독거노인가구 CC-TV 관찰
 - 읍면단위 순회 최첨단 엠블란스 운영: 대기업 1사1촌 운동의 실질적 농촌 지원 유도
- 영세고령거주자들을 위한 농촌 공동시설의 생산적 활용(생산적 복지)
 - 마을회관, 경로회관 등 활용도가 적은 농촌 공동시설을 영세농, 고령농 등 생산적 일감갓기 일터로 적극적 활용
- 영세고령농을 위한 생활안정정책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개선,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개선,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선
 - 국민연금 지원 강화: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농업인 범위 확대와 기준소득금액 상향조정, 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을 농가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변경
 - 농지연금제도 정착 지원 및 개선: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산간오지 영세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 지급조건 개선(담보농지 가격평가 시 일정 비율 우대)

□ 농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확대

○ 주요 농림정책(2011년도 농식품부 업무보고)

- 에너지 절감을 위한 농업용 온실 다겹 보온커텐 보급 확대
- 지열 냉난방시설 확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 ('10)3개소, ('11) 6개소, ('13까지) 15개소

○ 쟁점 및 과제

- 지열, 공기열, 태양열을 이용한 Eco 냉난방 첨단원예시설 개발 확대 지원 필요
- 현재 지열 냉난방시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제주도의 지중공기·남부지방 등의 공기열 이용 냉난방시설에 대한 지원, 태양열 이용 냉난방 시설까지 개발 및 시설 설치 지원 확대 필요
-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적극적인 분뇨처리시설 확대를 위해 축분이용 에너지화시설 확대 설치 지원

□ 농업인력 육성

○ 주요 농림정책(2011년도 농식품부 업무보고)

- 후계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창업), 농수산업 인턴제
- 정예인력 10만명 육성, 농어촌활력 창출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농촌유치활동 전개, 지자체별 전담창구, 다양한 정착지원(교육프로그램, 영농자금)

○ 쟁점 및 과제

- 영농 세대교체 시대에 사업적 경영마인드를 가진 후계영농인과 귀농귀촌 영농인을 농기업인으로 육성
- 경영역량을 갖춘 30~50대를 2020년 영농 주력세대로 집중 육성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적극적인 귀농·귀촌 유도

- 심각한 농촌지역 인력 수급 불일치(mismatch)에 대한 인력공급정책 추진 필요
 - 농경연 설문조사 결과,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율이 83.3%에 달해 인력 수급 문제 심각
- 농축산업 고용인력에 외국인 의존도 심화 추세에 대응한 정책 수립 필요
 - 시설원예, 버섯재배공장 등 상시고용에는 합법 외국인근로자(E-9 비전문취업 취업사증)가 주류이며, 지역에 따라 국제결혼이주여성들도 유리온실 시설원예 농작업의 상근인력으로 증가추세
 - 오지·벽지 축사의 상시고용 또는 고랭지채소·양념채소 등 파종·수확기 일고에는 내국인 고용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
 - 특히 농업이 첨단시설원예(유리온실 등), 버섯재배공장, 대규모 축사 등 기업농화 추세에 외국인근로자 상시고용 수요가 증가함에도 농축산업 쿼터가 줄어들어 농기업 확장에 한계 노정, 향후 한국농업의 첨단농업화전략 달성에 장애요소로 작용(Bottleneck).

□ 자본기술집약형 첨단기술농업 육성

○ 전략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

- 자동센터·무인생산 기자재 및 종자, 기후변화대응, 동·식물 질병제어, CDM 사업화, 대규모 농산업체 육성, 생산·가공·유통 비용절감, 전통·가공식품의 세계화, 바이오에너지·생명산업 육성 등

○ 첨단 환경제어형 유리온실, 비닐온실 설치 지원으로 시설원예산업 육성

○ 식물공장(Vertical Farming) 육성 및 상용화로 전후방 관련 산업 성장 및 농업의 첨단화 유도

○ 종자전쟁시대에 대비하여 민간의 품종육성 역량 강화 기반 구축 및 R&D 투자 확대

○ 동·식물 자원의 IT·BT·NT 융복합화로 신기능성 작물 및 신소재 산업화 기술 개발 보급과 고부가가치 창출

- 원예작물·곤충 등을 활용, 기능성 소재 개발 : 감귤(인공피부 소재용 젤), 실크(인공 뼈), 곤충(항생물질) 등

- 식품분야 R&D 투자 확대로 세계일류의 식품제조 가공기술 확보하여 첨단기술을 이용한 가공무역 확대

□ 수출농업 육성과 동북아 수출Hub 구축

- 농식품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되게 주도할 수 있는 수출선도조직의 집중 육성으로 농가와 수출업체 간 계열화체계 구축
- 선키스트(미), 제스프리(뉴)와 같은 세계적 수출농기업 육성
 - 영세·소규모 수출업체는 조직화·규모화 및 수출창구 일원화
 - 뉴질랜드 제스프리의 키위 독점 수출 사례와 같이 품목에 따라 마케팅보드 설립과 수출창구 일원화 추진
-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동북아 농식품 Hub 육성
 -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Hub 생산 및 가공 기지 건설
- 해외 현지 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현지 수출물류센터, 대규모 판매·홍보센터 운영 등 한국식품 전용 해외 유통망 확대

□ 산지 및 소비지 유통혁신

- 농산물 유통개선은 기본적으로 물류체계의 개선과 경로간·주체간 경쟁 촉진을 통한 유통효율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선진적인 유통체계를 위해 거래방식의 선진화 추구 필요
 - 물류체계 개선과 유통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촉진을 통한 유통효율 증진
 - 농산물 계약거래 정착과 거래방식 투명성 제고로 거래선진화

□ 협동조합 경제사업 혁신

- 농협 신경분리에 대응해 농협 경제사업은 산지유통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도매 및 가공사업을 확대하여 소매유통업체와의 거래교섭력을 극대화하고 생산농민에게 가급적 많은 부가가치가 환원되도록 혁신

- 중앙회 경제사업은 산지유통의 지배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도매사업과 가공사업 분야에 집중
- 산지농협의 판매사업 전문화를 위해 신용과 경제를 실질적으로 분리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인력과 조직으로 판매사업 추진.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의한 공동판매의 규모화와 전문화가 중요
- 농업인력의 부족과 초고령화시대에 산지농협은 생산단계부터 직접 관여하는 재배 관리와 수확을 전담하는 작업단을 운영하여 생산부터 책임지는 역할 수행 필요

**2011년 농업전망과 정부·국회·농민단체
역할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발 제 문 2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계획

김덕호 농업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

간담회 자료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계획

2011. 1. 26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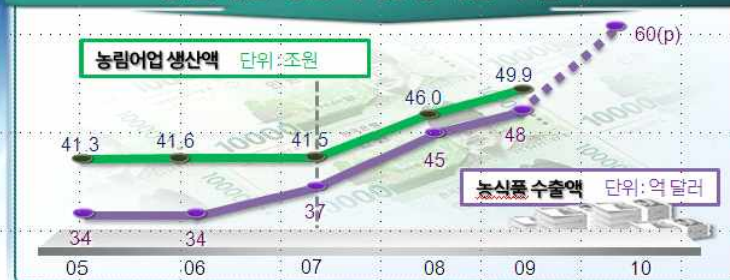
- I 2010년 추진실적 평가
- II 2011년 핵심 정책과제

I. 2010년 추진실적 평가

1. 성과

I. 2010년 추진실적 평가

농림어업 생산액 및 농식품 수출액



농어업 선진화 기본틀 마련

- 농업·어업 재해보험 통합·확충
 - 재해 보험법('10.1) / 품목 : ('07) 21개 → ('10) 41
-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 (밭)이용농가수 : ('07) 16천호 → ('10) 80
 - (벼)참여농가농기계부채 : ('08) 953만원 → ('09) 785
- 농어업 발전 기본틀 구축
 - 유통구조·쌀 수급 개선, 보조금·R&D 개편 등

식품산업 기반강화 / 규제 완화

- 식품산업 발전기반 조성
 - 식품산업 종합대책 수립, 김치연구소 설립
- 막걸리 등 쌀 가공산업 활성화
 - 가공용 쌀소비 : ('07) 18만톤 → ('10) 30
 - 막걸리 수출액 : ('07) 290만불 → ('10) 1,900
- 농지·수산·식품등 규제 318건 개선('08~'10)
 - * 2010년 규제개선 최우수 부처(정부 평가)

위험요인에 대한 근본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기상이변 대응체계 미흡으로 채소류·수산물 가격 불안정
 - 공급 과잉 / 부족에 대비한 사전적·계획적 안정화 대책 마련이 중요
- 구제역 등 가축질병 대비태세 부족
 - 일부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후 소독 미실시, 법적 장치 미흡, 초동 방역체계상의 문제 등

쌀재고 과잉 및 농협법 개정 지연

- 벼의 타작목 전환, 쌀소비 확대 등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상황
- 농협법 개정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 계류 중

농림수산부문의 위험관리, 성장동력 확충 등에 정책역량 집중

5

II. 2011년 핵심 정책과제

- 1 농림수산분야 위험관리 강화
- 2 성장동력 확충
- 3 농어촌 지역 활성화

6

1 농림수산물분야 위험관리 강화

- 1 가축질병 대응 강화
- 2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
- 3 쌀 수급 안정 및 가공산업 발전
- 4 재해 등 기타 위험관리 강화

7

1. 가축질병 대응 강화

II. 2011년 핵심정책 과제

방역선진화를 통한 가축질병 최소화

국경검역
강화

축산농가
책임성 확보

효과적인
초기대응

8

국경검역 강화

- 해외여행 후 입국 신고·소독 의무화(법무부, 관세청과 협조)
-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축산농가의 책임성 확보

- 축산업 허가제 도입(교육 의무화)
- 축사 출입 차량·인력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 외국인 근로자 신고·교육·소독 의무화
-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 농장 폐쇄, 보상금 삭감 등 제재 강화

초기대응체계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예찰·검사 및 초기 진단능력 제고
 - 지방 거점에 정밀검사 기능을 갖춘 진단실험실 설치, 항원 진단키트 공급
- 발생시 기동타격대(초동대응팀, 초기매몰팀) 현장 투입

9

2.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선진화·효율화

안정적 생산

- 관측정밀화
- 계약재배 확대

실효적 비축

- 비축·저장·가공
- 상황대응 수입체계

유통구조 개선

- 농·수협
- 거래제도 개선

10

농업관측 강화

- 작황·면적 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
 - 시세예측을 토대로 필요시 면적조정·수입 등 대책을 적기에 마련
 - 가격안정대 설정·가격구간별 대책 추진(매뉴얼 개발)
- 기상이변시 관측 횟수 확대(월 1회 → 3회 실시)

농협 등의 가격안정 기능 강화

- 산지 농협은 계약재배·수집, 농협중앙회는 판매에 집중
 - 중앙회의 광역 마케팅 조직 확대 및 학교급식 등 직거래 확대
-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생산량의 50%까지 확대
 - (현재) 10% → ('11) 15 → ('13) 30 → ('15) 50
- 산지유통인을 법인화하고 품목전문조합으로 유도

11

비축·저장·가공

-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의 비축 물량 확대 [양념류:(현재) 3% → ('15) 10]
- 저장성 없는 배추·무는 김치 등으로 가공 비축 [상품김치:(현재) 40% → ('15) 60]

도매시장 제도개선

-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정가·수의 매매 활성화 등 경매제도 개선(농안법 개정)
- 경쟁 촉진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금정산조직 신설 추진

직거래 확충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

- 사이버거래소 활성화 : ('10) 1,600억원 → ('11) 2,500 → ('15) 5,000
- 소비지 인근의 대형 정례 직거래장터 확대 : ('10) 2개소 → ('11) 8
- 1사1촌, 소비자단체 및 생활협동조합 등과의 직거래 확대

12

3. 쌀 수급 안정 및 가공산업 발전

II. 2011년 핵심정책 과제

'15년까지 쌀 수급균형 달성
가공용 소비를 생산량의 15%로 확대(현재 6%)

공급 축소

- 재배면적 감축
- 조기 관세화

수요 확대

- 가공산업
- 소비홍보
- 품질고급화

유통 개선

- 공정거래
- RPC대형화

13

2011년 중점 추진계획

II. 2011년 핵심정책 과제

공급 축소 [밥쌀용 재배면적: ('10) 86만ha → ('11) 81만 → ('15) 70만]

- '11년 중 논 4만ha 타작목 재배(쌀 20만톤 이상 감축)
* 농지매입 비축 1천ha 시범 추진('11년 예산 1,500억원)
- 관세화 논의 조기 마무리, '12년부터 관세화 전환 추진

가공수요 확대 [가공용 소비량: ('10) 30만톤 → ('11) 36만 → ('15) 60만]

- 안정적 원료 공급 : 정부쌀 할인 + 가공용 쌀 재배단지('11: 1천ha → '15: 3만)
- 55개 가공 핵심기술 개발(품종·제품·기기·신소재 등)로 고부가가치화
- 쌀 수출확대 : ('11) 가공품 위주 5만톤 → ('15) 10만톤 이상
- 자금·세제 지원 및 공공기관 소비확대 유도(쌀 가공산업 진흥법 제정)

RPC(미곡종합처리장)의 시장 교섭력 제고

- RPC 통합·규모화 촉진(진입·퇴출기준 강화)
- 쌀 대표가격 형성을 위해 사이버상의 도매거래 활성화, 쌀 자조금제 도입 추진

14

4. 재해 등 기타 위험관리 강화

II. 2011년 핵심정책 과제

사후 복구 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

자연재해

- **농어업기상정보 분석 및 신속한 전달 체계 구축**
- 관측센터, 농어업기상정보 담당 조직(농진청)과 기상청간 협조체계 강화
-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31종), 재해 보험 품목 확대(41개 → 50)

어선사고

- 노후어선 안전검사 강화 및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어선**으로 대체 추진
-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설치, 구명뗏목·조끼 보급 확대

산불

-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한 감시인력, 시설 및 장비 확충
- 산불감시원(3만명) 집중배치, 감시카메라(762대)·신고단말기(14천대) 운영

15

2 성장동력 확충

- 1 R&D 개편
- 2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 3 해외 농림어업 개발
- 4 수산/산림 자원 조성

16

1. R&D 개편

II. 2011년 핵심정책 과제

‘14년까지 EU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 농업 기술 수준(세계최고 100 기준 : 미국 96%, EU 85, 한국 67)



투자확대

-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 개방대비 경쟁력 확보(8,600억원, 11.2% 증가)
- 생명자원소재 산업화(10년간 1조원) 등 대형 공동프로젝트 추진



현안해결
마리준비

- 가공용 쌀, 고온적응 배추 등 신제품 개발
- 기상변화 예측, 식물공장, 기능성 식품 등 기술 개발



실용화
산업화

- 우수기술 실용화를 지원하는 기술보증제 및 산업자금 지원제 도입
-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연구·분석 전문기관 육성
- * 예) 네덜란드 Key Gene 社 : 해외 유명 분자마커 개발 및 분석대행 전문기업

17

2.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II. 2011년 핵심정책 과제

식품산업 및 농림어업 동반 성장



식품산업
육성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12년까지 300개 육성)
-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본격 추진(‘14년 완공)
-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망 확충(‘11년, 5개소 시범 사업)



수출 확대

- ‘11년 농식품 수출 76억불 달성(‘12년 100억불 목표)
- 중국 청도에 수출전진기지 건설 및 공세적 마케팅 전개



한식세계화

- 민·관 협력 방식의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 한식 이미지 제고
- 현지인 선호 메뉴개발 및 외식업체 해외진출 촉진

18

3. 해외 농림어업 개발

II. 2011년 핵심정책 과제

해외 농림어업 개발과 국제 협력을 연계, 개발효과 극대화



- 정부간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개발(예: 필리핀 MIC모델) 추진
 - ※ 민간기업의 해외 농장 개발 : ('10) 7개국 18기업 → ('11) 9개국 22기업
-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대한 협력 사업 확대
 -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 추가설치(5개국) 및 FAO·Gates재단과 공동 사업



- 일·중·러 수산자원 외교 강화(자원확보 및 불법어업 방지)
- 페루·튀니지·솔로몬 등에 조업권과 연계한 ODA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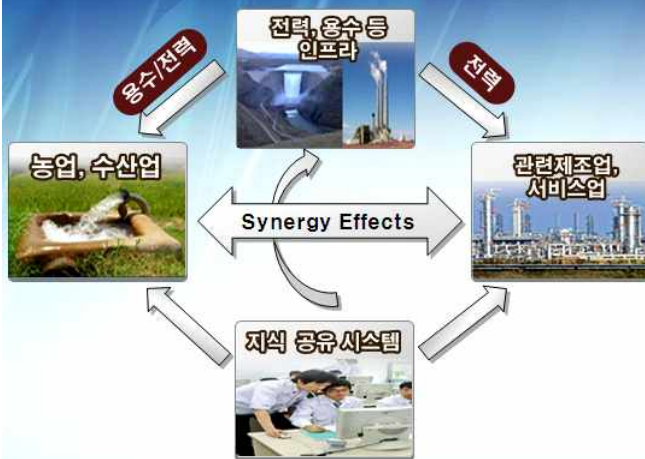


- 산림자원 외교 다변화로 '11년 해외조림 25천ha 실시
- UN 사막화방지 협약 총회 개최(10월) 및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추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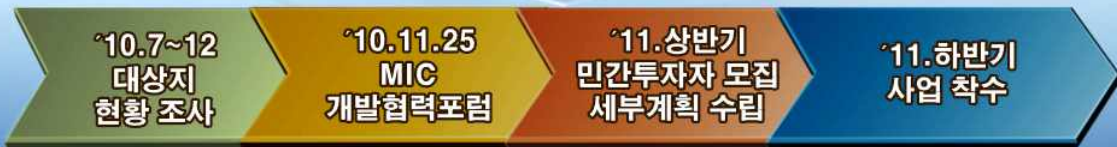
사례 : 필리핀 복합산업단지 (Multi-Industry Cluster) 조성

2011년 핵심정책 과제



- ▶ 정부간 협력으로 토지확보 후,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
 - 농업 생산, 수확 후 관리시설 우선 시행
 - 바이오산업,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확대

우리의 경험 + 필리핀 잠재력 = 상생적 개발협력



20

천혜의 수산자원과 산림자원을 국가성장 동력화

양식산업 육성

- 갯벌을 활용하여 수출용 참굴, 해삼 양식 추진(25ha)
- 대규모 자본유입 촉진을 위해 어장 임대차 허용 추진
- 외해 가두리양식장 5개소 신규 개발(참치2, 일반어류3)
- 참치 완전양식을 위한 종묘 및 배합사료 생산기술 조기개발

임산업 육성

- 리기다소나무 등 녹화수종을 경제수종으로 대체
- 국산목재 공급 확대(자급률) : ('10) 3.6백만^m (13%) → ('11) 4.2백만^m (15%)
- 펠릿수요 다변화 : 농가주택 위주 → 공공기관, 산업시설로 확대
- 저소득층에 녹색일자리 제공 : 6개 분야에 4만 5천명 고용

3 농어촌 지역 활성화

- 1 농어촌 활력 증진
- 2 농어촌 복지 지원 확대
- 3 보조금 등 지원체계 개편

1. 농어촌 활력 증진

II. 2011년 핵심정책 과제

정예인력 육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

인력 육성

- 농어촌 사회의 핵심리더 10만명 육성
- 핵심리더 주도하에 농어촌의 획기적 변화 도모
 - 의식개혁, 경영혁신, 특성화 마을 조성, 공동체 활성화 등

추진 체계

- 중앙과 지자체에 추진기구(범국민운동본부) 설치
 - 각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범국민운동 전개
- 마을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 운영

분위기 확산

- “(가칭)대한민국 농어촌 마을 대상” 시상
 - 잘하는 마을에 정책자금 등 집중 지원
- 1사1촌 등과 연계, 대국민 홍보 강화

23

2. 농어촌 복지지원 확대

II. 2011년 핵심정책 과제

복지지원을 통한 농어촌 사회 안정

생활안정

-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역(逆) 모기지론) 제도 시행
-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및 건강장수마을 조성('11년까지 582개소)

교육·주택

- 영유아(시설 미이용)양육비 지원 확대(35% → 45)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거치기간 연장(1년 → 2년)
- 농어촌주택개량(8,230호)

지역 공동체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적극적 복지』 실현
 - 농어촌 공동체회사 1,100개소 육성·건강한 복지 농어촌 만들기
 - * (사례) 양양 송천 떡마을 : 부녀자 참여 월 170만원 소득
 - 완주 안덕 체험마을 : 노인 참여 월 30만원 소득

24

3. 보조금 등 지원체제 개편

II. 2011년 핵심정책 과제

보조금 개편

- 농어가 지원은 산업적 지원과 복지 지원으로 명확히 구분 운영
 - 대규모 농가 : 장기저리 융자
 - 소규모 농가 : 직접지불금 및 복지지원 확대
-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동력, 위험관리분야에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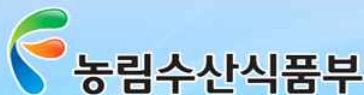
민간투자 촉진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농식품투자조합 확대('11년 10개 펀드, 2,320억원)
- 간척지에 대규모 농업회사(8개소), 수출 농업단지(15ha 완공) 조성

조직역량 강화

- 농협법 개정 조기 마무리, 사업구조 개편 본격 추진
 - '12년 출범이 가능하도록 자산실사, 자본금 확충, 조직개편 준비
- 농림수산식품분야 기관간 중복·유사기능 점검, 효율화 추진

25



농림수산식품부

감사합니다.

26

**2011년 농업전망과 정부·국회·농민단체
역할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발 제 문 3

2011년도 한농연 주요 농정 기조 및 대응방향

박상희 정책조정실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발 표 자 료

2011년도 한농연 주요 정책 및 사업 계획

본 자료는 한농연 이사회를 통해 확정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계획 초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1.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 농정 평가)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돈 버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을 주요 농정 지표로 삼고 있음. 이에 본 연합회에서는 지난 해 4월 ‘이명박 정부 중간 평가’를 통해 현장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낙제점 수준의 평가가 나옴
- 위와 같이 이명박 정부 농정에 대해 현장 농업인들이 냉정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농정 시행에 따른 정책 성과가 어디에 귀속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임. 예컨대, 한식세계화 사업, 식품 가공산업 육성 등이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실제, 농가소득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32,303천원에서 2006년도 농가소득은 30,523천원으로 하락하였으며, 농가계층간 격차는 2004년 5분위/1분이 비율이 9.8배에서 2008년에는 11.2배로 증가하여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78.2%에서 2008년에는 65.3%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더욱이 이와같은 농가들의 삶의 질 하락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고통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와 한농연 등 농민단체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총론은 다르지 않은 만큼,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에서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고 간극을 좁혀 농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램

2. 2011년도 대 정부 대응 및 농민단체 연대

1) 2011년도 대 정부 대응 기초

가. 주요 내용

- 생존권 투쟁은 모든 사회 조직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
 - 한농연은 농권운동 집회시 가장 큰 인원 동원을 하는 농민단체로써 사회적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 그러나 일반 기업의 노동조합들이 구조조정 등 생존권에 사활을 걸고 투쟁을 하는 것처럼 농업개방, 구조조정, 농업보조금 축소 등 농민 생존권에 사수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

-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농업인
 -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이면서 고객인 농업인들이 의사 결정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이 사라지고 있음. 실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간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 '위원회', 'T.F.' 구성이 현저히 줄어들음
 - 이에 이명박 정부의 농정에는 농업인과 농업·농촌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반영은 커녕 논의의 장조차도 마련되지 못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의사표현 방식은 아스팔트 투쟁이 될 수밖에 없음

- 정부는 소통 강화, 농민단체는 정책의 합리성·전문성 강화가 필요
 - 현재와 같은 정부와 농민단체의 대립과 반복이 계속된다면 '치킨 게임'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이는 농업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이에 정부는 농민단체와 T.F 및 위원회 구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 정책 시행에 따른 상호 이견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며 농민단체도 정책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나. 대응 계획

- 정책 대안 제시 및 생산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견인 역할 수행
 - 농민단체의 정책 제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장점이 있지만, 현장에 치우치다 보면 현실성과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임. 이에 한농연에서는 상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의 현실성과 합리성, 전문성을 보완할 방침

- 농업계 내 가칭 '갈등조정위원회'(사업 T.F) 구성 등 사회적대타협 제안
 - 농업계 내에 가칭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즉, 아일랜드의 사회적 대타협처럼 농민단체와 정부가 농업의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해 한발씩 양보를 하여 사회적 대타협의 노력 필요

- 상시 집회 체계 구축을 통한 야성(野性) 강화
 - 이처럼, ▲생산적인 정책제안,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등 농민단체에서 대안 제시와 소통을 요구했음에도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한농연은 대정부 강경 투쟁의 선봉장이 될 수밖에 없음
 - 특히, 한농연은 집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력 과시를 위한 대규모 집회보다는 현안·소규모·상시 집회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

2) 시민사회(농민)단체 연대

가. 주요 내용

- 농업계 단일 전선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 현재 농업계는 수많은 농민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농업계의 주요 현안

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민단체가 단일 전선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임. 이에 모든 정책에 연대하는 것보다는 상호 이념과 노선이 비슷한 정책에 대해 정책 연대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한농연의 판단임

- 즉, 단체에 속한 회원들이 이념과 노선을 달리 하는데 모든 정책에 대해 연대를 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양산 할 수 있는 만큼 의견을 같이 하는 정책에 대해 단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생산적일 것임

나. 대응 계획

□ 하드웨어적 연대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연대에 적극 노력할 방침

- 농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연대를 통해 농업계 단일 전선을 구축할 방침

□ 기후온난화·환경 등 범 농업적 이슈에 대한 연대 추진

- 농업을 농업인들의 문제로 보는 것 보다는 기후온난화·환경 문제 등 농업을 보다 폭 넓고 깊게 이슈화한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농업의 문제에 대해 관심과 공감을 가지고 이해하려 할 것임
- 이에 기후온난화·환경 등 범 농업계 문제로 이슈화하여 대응하고 관련 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을 추진할 예정

3. 주요 핵심 정책 사업

가. FTA 등 농업개방

가. 주요 내용

- 현재 농업계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구제역, 쌀값 하락, 청년 인력 유입 부재 및 고령화 문제 등 내부적인 위협 요인들로 고통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세계 농업 초강대국인 한-미, 한-EU FTA가 체결이 되고 비준을 앞두고 있고, 중국과의 FTA도 산·관·학 연구가 종료되고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상가상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

나. 대응 계획

- 피해보전직불제 대체 입법화 등 추진
 - 한미 FTA 피해대책으로 나온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기준가격 및 보전율이 낮고, 그나마 지원기간도 7개년도만 설정하여 농업보조금으로 경쟁력 키운 외국 농산물 수입에 농가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부담하라는 것이니 만큼 현장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음
 - 이에 현장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있는 대책 중심으로 피해보전직불제 대체 입법을 추진
- FTA 추진에 따른 이득산업,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무역조정)
 - FTA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수입 공산물 및 농산물이 수입되어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그 주체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임. 이에 FTA 추진으로 피해 산업이 희생을 감수한다면 FTA 이득산업이 피해산업에 대해 기금 조성을 통

해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무역조정' 정책이 필요

- 이를 위해 무역조정지원법 일부 재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피해산업이 이득보는 산업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할 예정

나. 농협법 통과 및 농협경제사업활성화

가. 주요 내용

- 농업인을 등에 업고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2008년 6월 기준)
 - 시군금고 수신액 42조원(총 수신의 30%), 정책 자금 대행 20~30조원(전체 대출금 40%), 지역 조합이 예치하는 상호금융특별회계 37조원
- 그럼에도 농협중앙회는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에 더욱 치중하고 있음
 - 총 자산 151조 1천억원 중 143조 8천억원이 신용사업에 치중
 - * 농협중앙회 직원 1만 6,400명 중 1만2,500명이 신용사업 소속(80%)
 - 경제사업 적자 1,707억 중 917억원(총 적자액의 54%)이 내부 이자 부담가 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 * 농협 내부 이자율 6.4% => 우량기업 이자율 5.1%
- 그렇다 보니 산지조직화는 걸음마 수준이고 산지유통을 장악하지 못해 소비시장(대형마트)에서의 가격경쟁에서 유린당하고 있음
 - 산지조직화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공선출하율은 겨우 10%를 넘고 있으며, 그나마 산지유통조차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 가격 경쟁에도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음. 예컨대, 대형마트의 쌀 및 농산물 미끼·할인판매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더구나 중앙회가 지역조합의 지원·지도·교육 기능보다는 지역조합과 신용·경제사업이 경합되어 지역조합의 활성화에 오히려 많은 제약이 되고 있음. 실

제, 중앙·지역조합 신용 점포 근거리 위치에 하여 지역조합 신용사업 경합, 목우촌·한삼인·하나로마트 등의 사업 등이 지역조합 사업과 경합하고 있음

- 경제사업활성화를 골자로 한 농협법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작년 11월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농협법은 농업계 단일안이 반영되지 않아 농업계로 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 현재의 논의 구도로 볼 때 농업계 단일안이 반영·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더러, 금융지주회사 분리 위주의 농협법 개정 구도로는 경제·교육지원 사업의 공동화마저 초래할 우려가 높음
 - 한농연과 올바른농협개혁범국민연대는 김춘진 국회의원에게 입법 청원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임

나. 사업 계획

- 농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농협법 국회 처리 거부 운동 전개
 - 한농연은 농업계 의견 조율 및 여야 정치권에 대한 설득작업을 적극 실시 하되, 농업계 단일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농협법 개정을 보이콧하는 등의 강력히 대처할 것임

※ 한농연의 요구사항(농협법 개정 관련 농업계 단일 요구사항 조정안)

- 현행 농협중앙회 자본금을 경제사업 부문에 최우선·최대 배정(경제사업 부문 최소 자본금 규모는 6조원 이상)
-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부족 자본금은, 자산 재평가후 ▶1차로 일선 조합 보유 예수금 자산을 활용하여 확보하고 ▶2차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출자를 통해 확보
- 상호금융연합회 독립법인화 시기는 법 시행 후 3년부터로 하되, 실무 준비작업을 위한 독립사업부제(상호금융대표이사) 체제를 출범
- 사업분리시 발생하는 세금은 물론 분리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

- 농업계 의견이 반영된 농협법이 통과 될 경우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농협 신경분리 검증위원회' 구성을 촉구 할 예정
 - 농민단체, 정부, 농협, 학계가 참여하는 농협 신경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가 경제사업활성화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예정

- 농협중앙회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개혁 드라이브
 - 그동안 농협과 농민단체가 농협 개혁을 놓고 많은 갈등을 빚어온 것이 사실임. 앞으로도 농협이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을 지속할 경우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한농연이 있을 것임
 - 그러나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농업인 실익 증진 사업에 매진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농협의 파이를 키우는 투쟁 쪽으로 전환할 예정. 농협은 농업인들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임
 - 예컨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안, 예산 확보에 농민단체가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산지조직화를 위한 농민 교육, 지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 즉, 농협 자산과 사업을 키우고 그 자산과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투쟁을 전개할 예정

다. 도매시장 개혁 등 농산물 유통

가. 주요 내용

- 배추값 파동으로 촉발된 농산물 유통의 문제에 대해 많은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농가소득 보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날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물가 안정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 현장 농업인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음
 - 단적인 예로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서킷브레이크(circuit

breakers)¹⁾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가격폭등시 적용 여부는 검토된 반면 가격폭락시 농업인(출하자)의 보호를 위한 대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함

- 더욱이 현장 농업인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데 도매시장법인들의 경매 비리, 시장도매인들의 ‘칼질’ 등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음
- 아울러, 대형마트의 막강한 구매력(buying power)을 앞세운 소비지 시장의 거래 교섭력 강화에 산지에서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대형마트의 규모화로 인해 산지의 또 다른 거래선인 중소 상공인, 재래시장 축소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나. 사업 계획

- 농안법 개정 추진
 -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지자체에서 농식품부로 환원, ▲경매 가격 폭락에 대비한 별도 기금 마련,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을 추진
- 농산물 유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적극적인 대응활동 전개
 - 농업계에서 유통 문제에 대한 농민단체의 관심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농산물 유통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유통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활동을 전개할 예정
-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산지 거래선 다양화(재래시장, 중소 상공인 활성화)와 동등한 가격 결정권 확보
 - 프랑스, 이탈리아처럼 보다 강력한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방침

1) 주식·채권 등의 증권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급락에 대응한 거래중지 제도임

라. 수확기 쌀 및 조기관세화 대응

가. 주요 내용

□ 쌀값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쌀 산업 여건

- 우리나라 목표가격 운용 및 직불금 지급은 전국 평균기준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쌀값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면 농가들이 그 차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농가들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쌀값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수취소득 추이>

단위 : 원

산지쌀값	목표가격(a)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40kg 조곡 수취 소득(b)	목표가격 대비 수취율 a/b×100%
55,000원	55,157	4,131	0	59,131	107.2
51,000원	55,157	4,131	0	55,131	99.9
50,000원	55,157	4,131	255	54,386	98.6
45,000원	55,157	4,131	4,505	53,636	97.2

가정1) 도정료는 80kg당 16,860원으로 계산

가정2) 목표가격 환산식(40kg 조곡) : 170,083(목표가격)-16,860원(도정료)÷2×72%

가정3) 지방자치단체 직불금 제외

- 그러나 농협 RPC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과 아울러 RPC 운영 효율화를 위한 농협의 자구 노력 없이 농민 조합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 농업인들이 많은 반발심을 가지고 있음

□ 수확기 쌀값 투쟁의 양면성에 고민하고 있는 한농연

- 수확기의 비이상적으로 높은 가격은 RPC 적자로 이어져 차기 년도 수매가 인하와 농협 배당금 미지급, 직불금 지급액 축소, 쌀 경작 조합원과 비경작 조합원간 갈등의 원인이 됨
- 이에 수확기 쌀 투쟁이 보다 농민의 실익에 맞게 전개 될 수 있도록 농가소득 보장 투쟁 기조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지역연합회 지도 업무를 강화

- 현장에서는 ‘쌀 조기 관세화=쌀 전면 개방’으로 인식하고 있음
 - 현장에서는 쌀 조기관세화에 대해 쌀 전면 개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쌀 조기 관세화를 농업인들의 공감대 없이 추진할 경우 조기관세화 추진시 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나. 사업 계획

- 쌀 조기 관세화의 명확한 입장 표명 및 책임 있는 활동 전개
 - 쌀 조기 관세화와 관련하여 국익과 농업인들의 실익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표 농민단체로서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활동을 전개
 - 아울러, 쌀 조기 관세화와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쌀 산업 발전 5개년 도 계획이 농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대응 활동을 전개
- 지역별 쌀 산업 발전위원회 구성을 주도
 - 지역별 쌀 산업 발전 방향 수립과 쌀값·매입 방식 결정을 위하여, 지자체·RPC·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별 쌀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을 주도

마. 지방농정 대응강화

가.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견제 및 견인 필요
 - 중앙정부의 경우 국회, 언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견제와 비판을 통해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는 지방의원, 지방언론, 지역시민사회단체의 견제와 비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함
- 지역 농정 대응을 통한 지역 농업인 권익 보호 필요

- 지방 분권화 및 권한 이양의 시대적 흐름 속에 중앙 정부의 많은 권한들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고 예산이 광특회계로 변경되는 등 지방농정의 권한과 자율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지방 농정이 지역 농업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만큼 지역 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농업인단체 앞장서야 함

□ 참고로, 작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진출한 한농연 출신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은 기초단체장 7명, 광역의원 32명, 기초의원 172명이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음

나. 사업 계획

□ 한농연 지역 연합회, 지역 농정 대응 강화

- 한농연 지역 연합회에서 지역 농정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수조례 발굴 및 제정 운동 전개, ▲지방 예산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
- 아울러, 지방의원과 지역 리더들이 지역 농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

바. 농업회의소 구축을 위한 대응

1. 주요 내용

□ 농업회의소는 위원회나 자문 등 형식적 차원에서의 민관 협의로 인한 농정 실패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현장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농업계에서 제안한 숙원 과제로, 한농연 및 농업계는 지난 1998년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왔음

□ 한농연은 1998년 이후 역대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를 요구해 왔으며, 지난 2008년 11월 대선공약 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 측에 농업회의소 설립을 공약사항으로 건의,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됨.

-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는 한농연 등 농업계 요구에 따라 시군단위에서 중앙으로 확산하는 상향식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추진
 - 작년 12월 진안, 나주, 평창 등 3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이들 사업을 평가한 후 연중 7개 시·군을 추가 선정할 방침임

2. 사업 계획

- 농업회의소 구체화 방안, 농업회의소 정관제정 및 사업 확산을 위해 공동 대응
 - 중앙 단위에서는 농업회의소 건설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기구 마련, 지역 단위에서는 농업회의소 추진 위원회가 구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 수행 지원

**2011년 농업전망과 정부·국회·농민단체
역할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발 제 문 4

2011년도 농업관련 법안 및 예산 관련 국회 역할
- 2011년 농림수산물위원회 현안 및 대응 -

윤태진 수석전문위원
민주당

2011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안 및 대응

1. MB정부의 그동안 농어업 정책 평가

- 경쟁만 지나치게 강요한 농어업정책(신자유주의적 사고)으로 농민고통 가중
 - 창조적 실용주의를 내세워 농어업에 적용, 시장개방에 적극적·공세적으로 대응 주장, 한국농업현실 외면
- ※ 한국 농어업 현실 : 시장개방→경쟁력 약화→교육 등 주변 환경악화→탈농어촌 및 고령화→희생불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속
 -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의 뉴질랜드식 농업 무분별한 벤치마킹 주장(정부보조금을 없애고 자가 경쟁력 제고 주장)
 - 국내 농어업대책을 보완하지 않고 다국가와의 무분별한 FTA 체결
- '농어가부채 탕감' 불이행 등 농어민과 약속 무시
- 성급하고 고집스런 정책추진으로 국민신뢰 상실
 - 한미쇠고기 협상 졸속 타결
 - 쌀 대북지원 재개 요구 묵살, 쌀 수급관리 곤란
 - 피해 보완대책 없이 한미, 한EU 등 FTA 성급한 체결
 - 농어촌특별세법 폐지 강행 및 농진청폐지법 개악 추진으로 농민부담 가중

2. 2010년 농어업정책 평가

- 농어업발전 또는 농어민 지원을 위한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이 대책부재, 사고만 다발
- 연초 대설피해 및 일조량부족으로 농업재해 발생

- 3차례 구제역 발생, 원인파악도 불확실, 대책미흡
- 4대강사업인 저수지독높이기 강행추진, 농민피해 발생, 4대강홍보예산으로 남발 무리
- 농협법개정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성급한 추진
- 쌀 재고량 증가와 20년전 가격으로 쌀값폭락 및 묵은쌀사료화 추진 물의, 대책은 부재
- 정부, 보조금을 빌미로 농민단체 길들이기 의혹
- 농어업 직불금 개악 우려 (진행 중)
-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추진 물의
- 배추 값 파동

3. ‘다방농민’ 최근 논쟁에 대한 고찰

- 과연 정부가 농어업 또는 농어민에게 펴주고 있는가?

□ 현황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작년 12월13일 ‘한미FTA 추가협상과 한국의 성장전략’이라는 조찬 세미나에서 농민을 “다방농민”으로 폄훼 발언
 - “(농민의) 모럴해저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가) 투자했더니 돈이 엉뚱한 데로 가더라.”라고 주장

□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부적절 발언

- 농어업이 식량의 근본이 되는 중요산업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발언으로 식량안보를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임
- 농업관련 국가예산 중 대다수는 농업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농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은 쌀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쌀직불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이번 발언으로 인하여 국민들 오해 우려
- 농민, 사활을 건 자존심 회복투쟁 필요

□ 실상은 가구당 고작 연간 130만원~200만원 보조금 수령

- 가구당 연간 약 130~2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 그나마 지급 보조금중 정부의 쌀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쌀직불금이 가구당 연간 50~12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 농어업 연간 지출액(농어업 결산·예산액)대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MB 정부 들어 약 15%대 수준이고 나머지 85%는 주로 농어업기반조성, 구조조정 등 비용으로 '농어업예산을 모두 농어민에게 퍼준다'는 인식은 잘못
 - 따라서 대다수 성실히 노력한 선량한 농민 폼페이 책임 추궁 필요. 만약 '다방농민'이 존재한다면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선임된 정운천 전 장관이 아닌지 의문
- ※1996년 외환위기 이후 2010년10월 말 현재 168조6천억원 공적자금 투입,
 이중 100조5천억원(59.6%) 회수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대기업의 CEO 연봉은 수억~수십억,
 외교부 장관 자녀특혜 채용 등이 도덕적 해이 사례임
- 또한 지급된 보조금이 WTO가 규제한 감축보조액 한도 1조4990억원에 매년 훨씬 미달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감축보조액 한도 운운하며 보조금지급액 확대 반대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필요

(표 1) 가구당 보조금 수령 현황

(단위 : 억원, 천가구)

구분	2007결산	2008결산	2009결산	2010예산	2011예산
보조금 합계 (농어업 지출액 대비 비중, %)	21,263	20,785	15,947	24,783	24,250
농어업 지출액	111,397	138,810	139,252	146,738	148,644
지출액대비 보조금 비중	19.1%	15.0%	11.5%	16.9%	16.3%
지출액대비 (쌀직불금 제외한) 보조금 비중	8.8%	7.8%	6.9%	8.3%	6.8%
쌀 고정직불금	7,120	7,118	6,328	6,650	6,195
쌀 변동직불금	4,370	2,791	-	5,951	7,993
농가구 수	1,231	1,212	1,195	'09년 적용	'09년 적용
가구당 보조금 총 수령액	173만원	172만원	133만원	207만원	203만원

(자료 : 농식품부)

(표 2) 농업분야 보조금 연도별 지급현황

(단위 : 억원)

보조금 내역	감축보조 여부	2007결산	2008결산	2009결산	2010예산	2011예산	계
합계 (농림예산 대비 비중, %)		21,263 (19.1%)	20,785 (15.0%)	15,947 (11.5%)	24,783 (16.9%)	24,250 (16.3%)	107,028
쌀 고정직불금	×	7,120	7,118	6,328	6,650	6,195	33,411
쌀 변동직불금	○	4,370	2,791	-	5,951	7,993	21,105
조건불리직불금	×	306	310	307	417	388	1,728
친환경농업직불금	×	175	263	409	520	379	1,746
경관보전직불금	×	10	26	96	157	139	428
경영이양직불금	×	113	131	324	699	623	1,890
농어업재해보험	×	493	491	548	1,029	1,367	3,928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41	132	295	118	68	654
축산공제료지원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내역)	○	234	264	298	-	-	796
축산 자조금 지원	×	145	198	208	262	248	1,061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	278	494	419	406	310	1,907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2,163	2,352	2,447	2,534	2,413	11,909
농어업인재해공제 지원	×	215	278	322	344	372	1,531
취약농가인력지원	×	39	58	60	65	65	287
농업자금 이차보전	△	5,561	5,879	3,886	5,631	3,690	24,647

※ 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직불금은 FTA발효 지연으로 지급실적 없음

(자료 : 농식품부)

□ 정부의 119조원 농어민 지원도 부풀리기 정책

- 정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농업과 농촌에 119조원 투·융자 계획 발표, 이후 한미FTA 비준안이 쟁점화 될 때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이 논의될 때마다 “119조원이 투·융자되면 문제없다.”식 낙관적 자평
- '07.12, 기본계획 보완하여 (당초)119.3조원⇒123.2조원(3.9조원↑) 증액 조정
- 최근 6년간('04~'09) 총 집행실적은 63조 5,052억원(계획대비 51.5%)

(표 3) 지원대상별 투융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실적('04~'09)	계획('10~'13)	계
합 계	635,052	597,040	1,232,092
(보조)	473,502	427,183	900,685
(융자)	161,550	169,857	331,407
농업인 직접지원	236,773	294,077	530,850
(보조)	133,813	185,727	319,540
(융자)	102,960	108,350	211,310
생산단체·업체 등 지원	78,286	81,638	159,924
(보조)	26,194	27,085	53,279
(지원)	52,092	54,553	106,645
SOC사업	159,005	119,591	278,596
(보조)	156,212	116,734	272,946
(융자)	2,793	2,857	5,650
정부사업	160,988	101,734	262,722
(보조)	157,283	97,637	254,920
(지원)	3,705	4,097	7,802

※ 자료 : 농식품부

- 정부가 분류한 방법이 합당하다고 전제하고,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동안 농어업인 직접지원금액은 23조6,773억원이고 이중 쌀직불금 등 보조금은 13조 3,813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0조2,960억원은 융자로 농어가부채 부담만 더 가중
- 10년간 농어업인 직접지원액 총액은 53조850억원 중 지원액 31조9,540억원만이 농어업인에게 지원된 금액, 그 이외 금액 91조2,552억원은 농어업인 융자와 국내 농어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투자되어야 할 금액
- 총 투·융자 지원액 123조2,092억원은 연간 12.3조원으로 연간 농식품부 예산액 약 14.5조원(총 예산액의 약 6%)과 비슷한 액수, 즉 국내 농어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투자해야할 예산액을 단순히 10년간 합한 것인데도 △“엄청난 액수를 농어업에 투자해도 농어업은 제자리걸음이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 또한 △한미FTA비준의 당위성을 홍보하면서 △농어민을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이용

- 그나마 농어업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액도 △쌀직불금 △경영이양직불금 △농업경영컨설팅 △농업인 교육훈련비 △농작물재해보험 △농어민연금지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되어야 할 금액
- 따라서 정부의 부풀리기 거짓정책으로 농어민을 매도하고 선대책 없이 한미 FTA를 비준하려는 논리를 이번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대응 필요

4. 2011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주요현안 및 민주당(국회) 역할

□ 구제역

- 국경검역 실패, 초동방역 실패, 차단방역 실패, 인력·장비·교육훈련 등 사전 준비 실패, 백신접종 시기 판단 미흡 등 총체적인 방역대응 실패에 대한 조사와 책임추궁,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상황인식 부족도 문제
- AI방역 실패를 포함한 청문회,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소재 밝히고 재발방지 시스템 재구축 필요
 -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시스템 개선, 인력·장비·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 장기적으로 가축의 면역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선진국형 동물복지 농장시스템으로 전환 지원 필요

※ 1월13일 One Point 국회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1차 보완

- 개정법안에 민주당 제시한 △가축전염병기동방역단 설치 △지정검역물(사료 원료·건초) 확대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정보 공개 △무역항·국제공항 등에 검역·방역 시설 설치 운영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가축방역관 기능 강화 △발생국 여행자중 농장방문자에 한하여 모두 소독 △구제역 발생시 방역비용 전액 국가부담 △살처분 집행참여자 심리적 치료 확대 등 반영

□ 한미FTA 비준

- 한미FTA 재협상은 연평도 포격으로 미국의 군사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개최된 객관적, 중립적 환경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굴욕협상, 이익균형을 상실한 협정
- 협정문의 점 하나도 안 고친다던 약속 파기 문제
- 민주당은 한·미 FTA 재협상에 반대, 협상시기를 객관적, 중립적 환경이 조성된 후 다시 시작,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비준동의를 저지할 것
- 재협상 성과라고 주장하는 돼지고기 냉동목살도 관세철폐시기가 발효 후 감축기간을 두지 않고, 2015년으로 고정되어 독소조항이 해소되지 못함
- 기존 농정에 이룸표 붙이기 수준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농수산업 피해대책 마련 필요
-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조건 개선 필요(물가상승률 반영한 기준가격과 차액 90%보전 법제화,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 무차별적인 FTA 추진 특히, 한중FTA 추진 등을 감안하여 농업 농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 한EU FTA 비준

- 정부, 한·EU FTA로 농어업 15년간 연평균 1,870억원 피해 예상(생산단체와 이견)
 - 농업(1,776억원) 중 축산분야(1,649억원, 93%) : 양돈(828), 낙농(323), 양계(218), 한육우(280)
 - 수산업(94억원) : 넙치류, 참다랑어류, 골뱅이, 불락류 피해 예상
- 정부, 축산분야에 향후 10년간 2조원 추가 지원, 세제지원과 제도개선도 추진 계획
- 정부는 한미FTA 대책(총 10년간 21.1조)중 축산대책(4.7조)+美쇠고기 쏫불민심에 따른 대책(2.1조)과 별도로 금번 2조원 대책 마련
- '11년 예산 날치기 처리로 정부가 발표한 한EU FTA 대책 거의 미반영
- 민주당은 FTA 체결시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국회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국회에 한·EU FTA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국회 논의를 필요 주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 집중 필요

□ 쌀값대책 및 쌀 조기관세화 추진

- 아직도 평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쌀값과 기상악화로 품위저조, 수확량 감소로 농가소득 감소 등 삼중고
-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물꼬를 틀 대북 쌀 지원 시급
- 물가 및 생산비를 고려한 목표가격 현실화 필요
- 농가소득안전장치 도입 시급
- 정부, 조기관세화 추진 예정→득실 명확히 따질 필요 있음

□ 농어업 보조금 개악 대처

- 정부, 보조금 지원방식 개편 관련 대통령에 '11년 업무보고
 - 산업적 지원과 복지 지원으로 구분 운영
 - 대규모 농가는 보조지원 단계적 폐지 용자지원, 소규모 농가는 직접지불금 및 복지지원 확대
- 농식품부 차관, 직불제 개편은 지금까지 무조건 지급하기보다 자생력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급 방향으로 개편, 다만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 **현재 보조금 지급총액보다 감소 예고**(10.6.21 상임위)
- 정부 직불금 개편 방안, 직불제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일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지급총액 기준 현재보다 단계적으로 삭감하려는 것으로 농어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됨
- 직불제 '개악' 절대 반대 의지표명 및 'FTA피해보험법개정안'과 '밭직불금법(농업소득보전법)제정안' 조속처리(논의)를 주장하며 대응할 것임
- 고작 가구당 연 130~200만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삭감하려는 정부논리에 지속적인 대응 필요
- 선진국들 우리보다 훨씬 높은 보조금제도 운영
 -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 보조금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15.5% △EU 22.3% △미국 14.6% △일본 5.4% △한국은 4.6%로 가장 낮음. "퍼준다"는 인식 잘못

※ 선진국의 농어업 보호정책

1. 미국

- 농가소득 3중 안전망(최저가격보장제(Marketing Loan)→고정직접지불제→ 경기대응소득보조(Counter-Cyclical Payment) *미리 정한 시장가격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 지원
- 대상곡물 : 쌀, 밀, 보리, 귀리, 목화, 땅콩, 옥수수, 수수, 콩, 유채 등 10가지
- 2002년~2006년 5년동안 농업소득 총액의 26.9%, 총 845억달러 정부농업보조금 지원 (우리나라는 동기 5년간 연평균 7천억원 지원, 농업소득 총액의 4.6%에 해당)

2. EU

- 단일직불제로 통합 : 농가별 또는 지역 지급률×농가 현재 대상면적

3. 프랑스

- 농산물 생산수당 ha당 400유로(62만4천원) 보조(평균 경작면적 120ha)

4. 일본

- 논밭경영안정대책 : 고정직불+생산실적직불
- 수입 감소영향 완화대책 : 기준조수입 대비 그 이하의 90%를 보전

□ 농협법개정안 처리

- 농협법 개정안은 경제사업활성화를 통한 농업발전 도모 목적
- 농협법 개정안은 정부가 '09.12월에 제출한 이래 그동안 상임위에서 논의해 오던 법안이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쟁점법안
- '10.11 상임위에서 기재부차관의 발언 등 정부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자본금 지원·배분 문제 △조세특례 △보험특례 △사업분리방식 등 주요쟁점에 대한 기재부와 금융위의 지원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안
- 그런데 지난 12월 정부의 예산·법안 날치기처리에 농협법개정안을 포함시키려다 무산된 해프닝, MB정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성과주의에 집착, 입법절차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경계필요

□ 캐나다쇠고기 수입재개 추진, 美쇠고기 수입조건 개악 대처

- 지난 9월 농식품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수입조건을 논의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물의
 - 수입조건으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 한하고 △특정위험물질은 배제하며 △소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 시행 등을 전제로 수입개방협상에 나설 것 주문
- 캐나다는 그동안 △자국이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했고 △한국이 미국 쇠고기 수입을 재개('08.4)한 점을 내세워 캐나다산도 쇠고기 수입재개 요구
- 한국,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 이후에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계속 발생되자 수입재개 거부, 캐나다는 작년 4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 ※ 캐나다 광우병발생 건 : ('07) 3건, ('08) 4건, ('09) 1건 등 총 16건 발생, 특히 '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출생한 소에서 12건(75%) 발생
- 한국,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협의 또는 양자 협의 중 유불리 검토 후 대응 예정
- 캐나다 쇠고기를 수입 재개할 경우 국민건강권에 위협적인 美쇠고기수입위생조건을 바탕으로 협상될 것이므로 한국에 매우 불리
- 정부가 강화된 수입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나 매우 위험한 캐나다산 쇠고기에는 이러한 조건으로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궁색한 조건임
- 캐나다는 일본·EU에 비해 광우병통제기준(사료규제조치, 검사비용 및 SRM범위) 미흡 및 최근('09)에도 발생하고 있고 광우병이 '10년2월 1건을 포함 총 17건 발생하여 안전하지 못함 ⇒ 수입재개 시기상조
- 수입을 재개할 것이 아니라 협상 대응 방안으로 과학적이고 국제사회에 통용될 대책 개발하여 대응 필요 (△미국도 캐나다쇠고기 신뢰하지 않는 점 △일본은 2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아직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 △일본·중국 등에는 소송을 걸고 있지 않은 점 등)
- 정부는 협상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과 소통 노력, 민간조사단 파견 필요
- MB정부의 잘못된 '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통상압력 계속 발생(▲

캐나다 WTO 제소 ▲미국, FTA 재협상·비준과 연계해 쇠고기시장 개방 확대 압박) 지적필요

- 한미 FTA 재협상과 연계해 쇠고기시장 개방 확대 압박 및 정부수용 가능성 견제 필요

□ 4대강사업인 저수지독 높이기 강행 추진에 따른 부작용 견제

- 정부, 저수지독높임 '11예산 113개 지구 8,730억원 편성
- 저수지독높임 사업은 △65개 졸속선정 △시급성과 무관하게 졸속사업집행, 4대강 물 대기용으로 건설 △무리한 턴키발주 △홍보비 22억원 임의 전용하여 낭비 등 문제
- '10년 결산심사에서 '감사원감사 청구' 요구 목살
-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9가지 삭감기준에 따라 △5,137억원 삭감안 제시
- ※9가지 삭감기준 : ①정부가 사업을 취소한 3개 지구 ②민원이 발생한 9개 지구 ③미 착공된 지구 중 지자체가 건설을 반대한 6개 지구 ④턴키 발주예정지구 예산액 30% 삭감 ⑤경과연수 10년 미만 11개 지구 ⑥ 안전진단 결과 B등급 이상 5개 지구 ⑦안전진단 후 최근 5년 내 개보수가 완료된 17개 지구 ⑧수진이 하류지천보다 현저히 나쁜 16개 지구 ⑨홍보비로 임의 사용된 10억원 삭감
- 그러나 정부여당, 정부(안) 원안대로 날치기 의결, 소수의석 한계
- 턴키발주 지역을 무리하게 개발 및 관광자원화 하여 4대강사업 보여주기 홍보에 이용할 것으로 보임
- 사업 집행과정에서 문제점 지속적인 감시 필요

□ 식량자급률 제고

- 지구촌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 급등 우려
- '10.7월부터 흑해 연안국가 가뭄피해, 러시아·우크라이나 밀 수출금지 제한 등으로 밀 값 상승하면서 타 곡물가도 급등세
- 세계 곡물생산량은 기상이변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 밀생산량 전년대비 6% 감소예상, 반면 세계 곡물수요는 인도·중국 등 신흥국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2.3% 증가 전망

* 곡물생산량 : ('08/'09) 22.4억톤→('09/'10) 22.3→('10/'11) 21.8

* 곡물수요량 : ('09) 21.9억톤 →('10년) 22.4 (2.3% ↑)

○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식량작물별 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목표달성 로드맵 구체화 필요

○ 자급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필요

○ 이를 통한 농어업의 중요성 인식제고 도모

○ 정부도 올해 식량자급율 상향조정 예정, 얼마나 올리느냐가 문제

※ 이명박 대통령 FAO 연설 : “식량안보는 생존과 직결된 인간의 기본권 문제입니다. 식량안보는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긴급한 현안입니다”

□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병해충, 냉해, 집중적인 우기화, 극심한 가뭄 등에 대비한 품종육성 및 기반시설 확충 필요

○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및 조기 정착을 위한 대상품목 조기 확대, 자부담율 하향조정, 재해보상 단가 현실화 필요

□ 배추값 파동과 유통구조 개선

○ 수급불안시 언제든지 해외 계약재배 통해 조달하겠다는 발상 저지 필요

○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예산배정, 예산날치기 처리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노지채소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산지유통종합자금(추가 증 800억원 계획→증 500억원 반영), 농업관측(증 11억원→미반영),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증 128억원→77억원 반영), 김치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증 118억원→미반영), 수도권 인근 배추·무 전문유통센터(증 23억원→미반영), 친환경 종자개발(증 60억원→미반영) 등

○ 배추, 대파 등 유통비용이 높은 채소류는 산지에서 1차가공(예: 절임배추), 2차가공(김치)을 거쳐 직거래 확산시켜 유통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산지 가공공장 확충 지원 필요

○ 포전거래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실태조사와 거래정보 제공 필요

□ 농민단체 통합

- '09.12부터 일부 농민단체, 협의체 탈퇴 등 분열
- 작년 말부터 품목단체를 포함 범농민단체 연합 노력, 바람직
- 약자끼리는 뭉쳐야 더 큰 힘 발휘
- 범농민단체가 탄생하고 조직화·단합한다면 조직 수장은 집단을 대표하여 '농민대통령'으로 추대 받을만한 권한 부여 및 농업 정책결정에 영향력 극대화 예상 (농어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 유도)
- 따라서 모든 농민단체가 참여한 통합과 단결된 운영 필요

5. 맺음말

- 제반 농어업 발전·지원정책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외에는 무관심 또는 부정적 시각으로 국회 처리 지연
 - 한나라당 농어촌 관련 국회의원들도 농어업 발전, 농어민 지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농어촌 이외지역 의원들의 '퍼준다'는 부정적 인식 또는 무관심이 문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시각도 농어업 발전에 걸림돌
- 정부·국민, 농어업을 '매우 중요하지만 귀중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공기와 같은 존재로만 인식 문제
 -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을 1차산업 중심으로 회귀시킬 수는 없지만 농어업이 중요한 만큼 유지되고 발전 시켜 나가야할 산업 분야임
- 최근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간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놓고 복지논쟁이 뜨겁게 진행,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이제 예산우선 순위가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
- 이에 농어업부문도 '보편적 복지'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여 제시할 필요, 민주당도 끊임없이 연구·노력할 것임.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

2011년도 **농업전망과 정부 · 농민단체 · 국회 역할** 관련 전문가 간담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4호 김춘진의원실

(TEL : 02-784-4170 | 홈페이지 : <http://www.cjkorea.org> | 담당자 : 신연석비서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TEL : 02-3401-6543 | 홈페이지 : <http://www.kaff.or.kr> | 담당자 : 박재영 차장)